

한상연 한경희 회장, “폭염 대응, 산업안전을 넘어 제조경쟁력과 공급망 관점에서 접근해야”

- 폭염, 제조업 생산성·품질·납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시적 산업위험
- 업종별 폭염 대응기준과 공급망 협의체계 마련 등 정책 고도화 필요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 한경희 회장(이하 ‘연합회장’)은 8월 5일 정책 논평을 내고, 폭염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문제를 넘어 제조업의 생산성, 제조원가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산업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제조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장은 정부가 올해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제조업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폭염 대응이 개별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점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제조 공정과 공급망 운영까지 함께 고려하는 산업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장은 주조, 열처리, 용접, 사출, 도장 등 고열 공정이 많은 제조업의 경우 외부 기온 상승과 공정열이 중첩되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냉방·환기설비 가동, 작업속도 조정과 휴식시간 확대 등 폭염 대응조치는 생산성, 품질, 납기와 제조원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속공정과 고열공정, 일반 조립공정은 작업환경과 위험요인이 서로 다른 만큼 업종과 공정별 특성을 반영한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과 작업환경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급망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제기했다. 협력기업이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작업 시간이나 생산계획을 조정했음에도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장은 “원청과 협력기업이 폭염으로 인한 생산일정과 납기 문제를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협력기업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급망 운영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기상이변이 아니라 제조현장의 생산환경과 안전 관리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상시적 산업위험”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제조업의 생산 지속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논 평

폭염은 제조현장의 안전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의 문제다.

정부는 올해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제조업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폭염이 더 이상 계절적 기상이변이 아니라 산업현장과 국민의 생명·안전,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은 폭염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다. 주조, 열처리, 용접, 사출, 도장 등 고열 공정은 작업환경 자체가 고온인 데다 최근의 기온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냉방과 환기설비의 상시 가동, 작업속도 조정, 휴식시간 확대 등은 생산성, 품질, 납기, 제조원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개별 기업의 부담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에도 직결된다.

이제 폭염은 산업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가 산업환경을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폭염은 기업경영과 공급망 운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산업 리스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비용 연동제가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는 폭염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과 생산환경 변화가 제조원가와 거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제조업은 업종과 공정에 따라 작업환경이 현저히 다르다. 연속공정과 고열 공정, 일반 조립공정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과 작업환경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급망 차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협력기업이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생산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납기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

는다면 산업현장은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원청과 협력기업이 폭염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일정과 납기 문제를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다. 동시에 안전은 규제와 점검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산업현장의 공정 특성과 거래구조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함께할 때 지속가능한 산업안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폭염은 이미 제조현장의 생산환경과 안전관리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시적 산업위험이다. 이제는 계절적 대응을 넘어 제조현장의 공정 특성과 공급망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및 관리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2026년 8월 5일

한국상생제조연합회 협회장 한경희